

# 경제혁신 정책세미나 토론요지

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

## 1. 비정상상의 정상화

### □ 공기업부문 외에도 경제시스템 전반을 정상화

- 불법복제, 위조상품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여전
- 근로자 파업시 사업장 안에서 점거농성하는 것도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

### □ 자원배분시스템 작동현황 점검, 정상화

- 시대가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입식 교육 여전  
→ 맥락이해·문제해결형 입시제도 확립 시급
-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구인난, 연공서열형 임금체제도 문제  
→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방안 마련해야
- 시중부동자금이 700조원 달하지만 자금순환은 가계대출 위주  
→ 벤처·창업부문 투자촉진, 금융-산업간 공조강화 필요
- 국토의 70%가 산지 → 토지이용규제 탄력적용해야

### □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경쟁·협력관계 개선

- 시장에서 공기업과 경쟁하는 민간업체에 공정경쟁여건 조성
  - 우체국택배의 경우 정부예산으로 지역거점마다 대규모 물류시설 투자에 나서고, 택배차량 이용규제도 받지 않음. 적자를 내면서도 저가수수료 고수 → 민간택배사 이중고

- LH공사 행복주택 공급으로 민간 주택업자의 어려움 가중
- 도로공사 도로만 부가가치세 면제. 민자도로는 부과대상
- 공공부문의 공사발주·납품관련 관행·제도 개선
  - 관급공사 입찰시 결과를 공개않고 유찰사실만 통보한 후 재입찰에 부치는 등 입찰관행의 문제 상존
  - 발주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되고 민원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부담
  - 제조업체가 납품기한을 어길시 외국업체에 대한 경우(10% 상한)와 달리 무한대의 지체상금 부과

## 2. 규제개혁

### □ 규제총량제 도입방향

- 규제개선을 많이 하는데도 규제총량은 계속 증가
  - 12,887건(09)→13,405(10)→14,078(11)→14,885(12)→15,065(13)
- 규제총량제 시행은 바람직하나 one in - one out으로는 한계
  - 重부담규제를 도입하고 輕부담규제를 완화할 가능성
  - 영국에서는 지난해부터 one in - two out 시행
- 건수에 의한 총량관리보다 규제부담 총량관리 바람직
  - 규제신설에 따른 부담 등 규제영향을 평가해 규제부담이 늘어난 만큼 줄이도록 해야 규제체감도 개선 가능

## □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절차 도입

- 규제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원입법사례 빈번
- 최근 도입된 환경관련규제의 경우 규제영향에 대한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입(화평법, 화관법 등)
-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위 심의가 면제되는 때문
- 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 등의 경우처럼 우리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제도화할 필요

## 3.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

### □ 서비스산업 육성의 공감대는 형성. 각론상 규제개선 지지부진

- 노무현 대통령도 의사들이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라며 영리병원 허용의 필요성 역설. 그러나 한미FTA 비준과정에서 국민오해 증폭.
  - 최근 정부가 자법인의 비의료 부대사업 통한 영리사업 허용방침을 밝혔지만 실행여부 불투명
- 의료, 교육, 법률 등의 전문서비스들이 공익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규제완화에 어려움
- 서비스 분야의 각종 규제가 정말 공익보호기능을 하는지 기득권 보호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, 규제를 완화하면 정말 공익이 무너지는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소통이 필요
-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이해집단이 반발하고, 국회가 법을 고치지 않으면 플랜에 그치고 마는 것이 현실
- 서비스부문 개혁의 경우처럼 실행이 쉽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3개년계획에 실행을 위한 액션플랜도 함께 마련할 필요

□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 상승발전

- 중소기업들의 경우 R&D는 물론 각종 규제절차 준수, 지원제도 활용 등에 관해 많은 어려움
- 이런 부문에 대한 컨설팅산업을 발전시킨다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, 고급일자리 창출, 중소기업 지원 등의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R&D서비스산업, 중소기업 컨설팅서비스산업 등 중점육성 요망